

목포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31일까지 신청...주택 최대 700만 원 지원

목포시가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도에는 총사업비 3억5천 만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90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창고·축사로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건축물 완전 철거 시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주택은 최대 700만원, 창고·축사 면적 200㎡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한해 동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에 방문·우편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최우선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선정한다. 오는 4월부터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 자원순환과(061-270-8560)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약 13억여 원 투입돼 610동의 주택·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해 왔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다"면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제거로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목포시가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도에는 총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90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목포시 제공

슬레이트 없는 무안 만들기

무안군(군수 김산)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11억여 원을 투입해 298건의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철거를 했으나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작년보다 4억6천만 원을 증액한 15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로서 ▲주택 슬레이트는 한 동당 최대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건축물 한 동당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1천만원,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금액 초과비용과 슬레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폐기물 처리는 신청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은 1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민재 기자

영암군수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발대식

영암군이 최근 군청 남산실에서 군 상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상가 활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군은 지난 1월 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과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단을 확대 위촉했으며 당연직 위원을 팀장으로서 과장으로 격상해 상가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더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전문성을 배가시켰다고 설명하며, 이로써 영암군수를 위원장으로,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고 상인과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모임의 토대인 영암 상가활성화 추진단이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진단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주민 합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 지역맞춤형 사업 제안 등 지

역사회의 현안과 다양한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영암읍 상권 실태조사를 꼽으며 지역현황 파악을 통한 향후 발전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영암읍 상가를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야간과 주말에 운영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이 논의되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거주지, 운영형태, 운영방식,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 조사 등 다각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가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가 활성화 추진단은 주민주도의 조합 설립도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자율상권조합 구성을 위한 사업 추진요건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최종민 기자

강진군, 상반기 주민역량강화사업 워크숍

강진군은 최근 제51회 강진청자 축제가 열리는 현장에서 농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상반기 주민역량강화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 대상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권역단위지구, 기초생활거점 등 이미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지역의 대표들로, 강진군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위한 중간조직인 농촌

활성화센터 주최로 열렸다.

지역역량강화는 인적, 물적 정보 자원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종합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말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권역시설물 보수와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시설물 유지보수는 지역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역량강화 사업 진행을 위한 교육장소 제공 등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식 센터장은 "농촌 고령화와 마을 과소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거리를 통해 농촌 공동체를 부활시킬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역량을 키워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종욱 기자

함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함평군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2023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상희 함평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장 등 20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올해 농림축산식품 주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53개 사업 750여원을 선정해 심의·확정했다.

또,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를 통해 친환경살 곡물건조기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대상자 우선순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문수 기자

신안, 폐농약 무상처리 시행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3일부터 폐농약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폐농약 무상처리 사업'을 시행한다.

토양이나 물에 흡수된 농약은 생물의 건강, 생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정량 사용과 폐농약의 적정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 대상은 농가 등에서 사용 후 남은 농약이다. 단, 미개봉 농약이나, 제조·판매·수입·보관업체에서 배출되는 농약은 제외한다.

배출방법은 배출자가 용기 밀봉 후 매주 목요일, 읍면 사무소에 배출 신고하면 군에서 무상처리한다.

신안군은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 시행근거를 마련했고, 잠금장치가 있는 폐농약 안전보관함 읍·면사무소 배치와 관리자 지정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완료했으며, 수집된 폐농약은 지정폐기물로 안전하게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장흥근 기자